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해서 검토하고 그에 적절한 방향으로 법제도 및 윤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법적 대응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가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복지법제연구실 연구위원)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가능성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법적 쟁점 및 법적 대응 방식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그동안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조사는 실시된 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적 쟁점 중 우선순위, 대응방식,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적 대응 방향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조사 대상 및 방식

인공지능과 법에 관해 연구를 해보았거나 인공지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종사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창립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도움을 받아 학회 회원들의 조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설문 문항을 웹 페이지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III. 조사의 주요 내용

1.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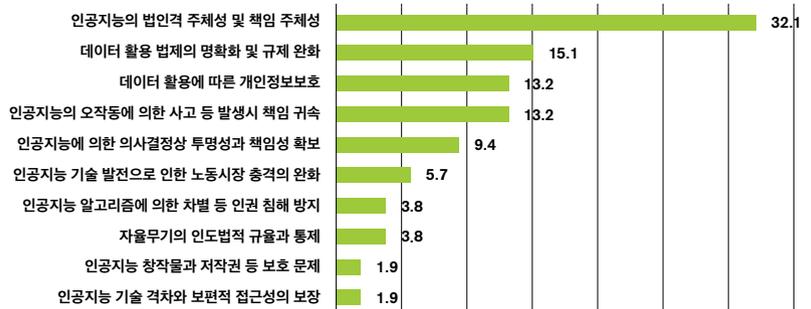
조사의 응답자는 총 53명이며, 소속은 대학이 22명(41.5%), 법조 실무(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10명(18.9%), 연구기관(대학 제외) 8명(15.1%)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75.5%(40명)에 해당하고, 40명 중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이슈를 연구한 경험자는 92.5%(37명)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인공지능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의 우선순위(중요도 및 시급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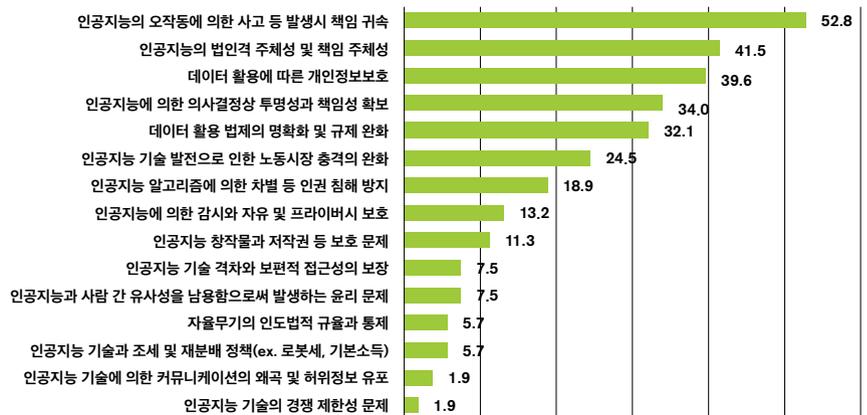
귀하는 다음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 3가지를 선택)

- | | |
|--------------------------------|-------------------------------------|
| ① 데이터 활용 법제의 명확화 및 규제 완화 | ⑩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및 허위정보 유포 |
| ②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⑪ 인공지능 기술 격차와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 |
| ③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 및 책임 주체성 | ⑫ 자율무기의 인도법적 규율과 통제 |
| ④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등 발생시 책임 귀속 | ⑬ 인공지능과 사람 간 유사성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 문제 |
| ⑤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⑭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의 완화 |
| ⑥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등 보호 문제 | ⑮ 인공지능 기술과 조세 및 재분배 정책 |
| ⑦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 제한성 문제 | (ex. 로봇세, 기본소득) |
| ⑧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등 인권 침해 방지 | |
| ⑨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와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 |

인공지능 시대의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을 묻은 질문에서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 및 책임 주체성’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1, 2, 3순위 응답 합계로는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등 발생시 책임귀속’ 52.8%으로 1순위 응답(‘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 및 책임 주체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서 발간한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기에 대해서 가장 시급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을 시급성의 순서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데이터 활용 법제의 명확화 및 규제 완화’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 2, 3순위 응답 합계로는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등 발생시 책임귀속’ 54.7%으로 1순위 응답과는 차이가 있었다.

‘법인격 주체성 및 책임주체성’은 중요도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시급성에 있어서는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쟁점은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도 및 시급성에 관해서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 귀속이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그 이후 구체적인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 및 책임 주체성', '데이터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데이터 활용 법제의 명확화 및 규제 완화'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법적 쟁점으로 나타났다.

	중요도(1+2+3순위)		시급도(1+2+3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등 발생시 책임 귀속	52.8	1	54.7	1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 및 책임 주체성	41.5	2	32.1	4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39.6	3	41.5	3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34.0	4	26.4	5
데이터 활용 법제의 명확화 및 규제 완화	32.1	5	52.8	2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의 완화	24.5	6	15.1	7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등 인권 침해 방지	18.9	7	22.6	6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와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13.2	8	9.4	9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등 보호 문제	11.3	9	5.7	11
인공지능 기술 격차와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	7.5	10	13.2	8
인공지능과 사람 간 유사성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 문제	7.5	10	1.9	15
자율무기의 인도법적 규율과 통제	5.7	12	5.7	11
인공지능 기술과 조세 및 재분배 정책(ex. 로봇세, 기본소득)	5.7	12	3.8	14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및 허위정보 유포	3.8	14	9.4	9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 제한성 문제	1.9	15	5.7	11

3.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격 부여 관련 인식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전자인격(e-Person)의 부여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을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을 창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8%,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56.6%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80%가 공감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법적 쟁점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윤리적 접근을 우선 실시하고 법제도적 접근은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리적 접근과 법제도 측면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윤리적 접근과 법제도적 접근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윤리적 접근과 법제도 측면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윤리적 접근을 우선 실시한 후 법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17%로 나타나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측면의 대응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인공지능 법적 쟁점 논의 방법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법정부 거버넌스 구축 및 종합적, 총괄적 역할을 위한 전문가 지정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산업계, 학계 등)에서 각 분야별로 자유롭게 논의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37.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민간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합의체 형성 등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인공지능 시대 대비 현행 법적 대응의 적절성 여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최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개정법률안과 로봇기본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법적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법적 쟁점을 고려한 개별 법령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산업계나 학계 등 민간의 윤리기준 마련과 같은 자율적 규율의 발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24.5%)이 있었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22.6%)이 뒤를 이었고, 인공지능의 법인격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법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3.2%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약 60%), 기본법 제정이나 근본적인 법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35.8%로 나타나 일단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고 법적 쟁점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IV. 조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그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해서 검토하고 그에 적절한 방향으로 법제도 및 윤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법적 대응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가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되는 규정은 수정하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 부과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어 향후 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